지역 저축銀 '유동성 높이기' 비상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조치… 7월부터 100%이상 유지 의무화 시행

광주·전남 7곳 작년말 평균 81%… 대출여력 감소·수익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광주·전남 7곳을 포함한 전국 105개 모든 저축은행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 예금의 100%를 대출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대출토록 규제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유동성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은 대출이자로 운영되는 경영구조상 유동성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대출여력이 크게 감소해 수익성을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규제선인 100% 이상을 유지하려면 예금 100만원 가운데 10~20%를 유동성 자금으로 보관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인 골든브릿지·대한·동양·무등·보해·센트럴·창업 등의 지난해 12월 말 현재 평균 유동성 비율이 81.45%였다.

이에 따라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과 달리 올 1분기 지역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00%를 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저축은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면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는 분기 말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경고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 개소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 개소식이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현대차 광주사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황유노 현대캐피탈 경영지원본부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향섭 광주 서구의회 의장, 홍범식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본부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삼성생명 상장 첫날 '금융 대장주'

주당 11만 4000원 시가총액 4위 신고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12일 증시에 입성했다.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며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株)로 등극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시초가 11만9500원 대비 5500원(4.60%) 급락한 11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 대비로는 3.6% 높은 수준이다.

장초반 12만1000원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곧바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더는 상승탄력을 되찾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454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206억원, 기관은 1148억원어치 삼성생명 주식을 순매수했다.

주가 흐름은 부진했지만 거래는 폭발했다.

삼성생명의 거래대금은 1조582억원에 달했다. 지난 3월 상장한 대한생명의 첫날 거래대금 5086억원의 갑절을 웃도는 규모다.

시가총액은 22조8000억원대로 현대차 29조5170억원에 이어 4위로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충격에 금융 대표주(株)인 신한지주(20조5566억원), KB금융(18조9312억원)의 시가총액이 크게 줄면서 삼성생명이 금융 대장주에 올라선 상태다. /연합뉴스

"지역민과 호흡하는 백화점 만들겠다"

고광후 롯데 광주점장 밝혀

"지속적으로 지역친화사업을 펼쳐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예향의 맥을 잇는 고급 패션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부임 한 달여를 맞은 고광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문화 향상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친화 마케팅을 선도하는 대표 유통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 전시·판촉 행사·지자체 연계 체험 이벤트 등 지역 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점장은 "고객과 약속지키기, 안내서비스 강화, 반품·교환상품 관리 강화 등으로 고객이 찾는 백화점을 만들고, 시민·환경단체, 지역 구단, 대학 등과 함께할 수 있는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롯데백화점 해외명품 부문장을 역임하고 대구 상인점장을 거쳐 광주점에 부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가족에게 채무 사실 알리면 불법"

금감원, 불법 채무추심 대응 10대 수칙

금감원은 12일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해 금감원(www.fss.or.kr),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10대 수칙을 보면 채권추심자가 방문 혹은 전화로 처음 접촉할 때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이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소멸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할 수 없고 채무감면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카드깡이나 사채업자 대출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아주겠다고 권유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채무를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고 채무변제 확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빛고을 건강타운에 노인 금융상담창구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장상인)는 12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에 '노인 금융전문 상담창구'를 지난 11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재테크 ▲주택연금 가입 등 각종 금융문제를 상담·처리하고 금융교실도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에 전문금융인이 상주, 상담을 실시한다.

장상인 지사장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금융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370-5732.

/윤영기기자 penfoot@